

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미 감독당국, 금융기관 임원보수 제한규정 신설 검토

- 미 감독당국은 금융위기를 유발한 것으로 지목되는 대형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위험부담(risk taking)을 억제하기 위해 임원보수에 대한 제한규정의 신설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 - 임원보수 제한규정이 적용되면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임원 보수의 상당부분을 현금 일시금이 아닌 주식이나 후불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강제될 수 있음.
 - 이러한 임원보수 제한 논의는 자산규모 10억 달러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 부적절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보너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도드-프랭크 금융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추진됨.
- 임원보수의 후불입금은 보수지급을 3년 이상 지연함으로써 임원들이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후불입금의 비율도 결정되어야 함.
 - 보수의 현금 일시금 지급이 리스크가 큰 단기목적의 투자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고 지급한 보수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미국 금융권에서는 임원보수의 후불입금이 보편화되고 있음.
- 유럽에서는 이달 초 트레이더와 임원에 대한 보수 제한규정을 마무리 지었으며, 영국 금융감독국 발표에 따르면 전체 보수의 80% 정도를 주식이나 후불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함.
 - 유럽 감독당국이 미국에 비해 엄격한 제한 조치를 먼저 시행한 이유는 유럽의 경우 금융위기 시 손실을 유발하고도 엄청난 보너스를 챙긴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반감이 미국보다 크기 때문임.
 - 미국의 임원보수 제한조치의 실행이 지연될 경우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규제가 덜한 국가로 임직원을 재배치할 위험도 존재하며, 영국 HSBC은행의 경우 본사를 영국 이외의 국가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.

(Wall Street Journal, 12/21)